

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

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와 제고 방안

현대경제연구원 | VIP Report | 2013.8.29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자영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, 전직 지원 확대를 통한 자영업 탈피 유도
자영업자를 위한 '상호부조형 공동체' 지원 확대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

- 배경
 - 전체 취업자의 22.6%가 자영업자
 -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는 상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
- 시사점
 -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
 - 자영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멘토링 및 컨설팅 체계 구축
 - 전직지원 확대를 통한 자영업 탈피 유도
 - 자영업자 중 만족도 취약집단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
 - ① 50대 자영업자는 현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과 '특화된 전직지원서비스' 개발
 - ② 서비스직 자영업자는 '연합화를 통한 영업, 마케팅의 공동화' 추진
 - ③ 영세자영업자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관심과 지역단체를 통한 다각적 지원
 - 자영업자의 사회심리적 측면의 개선을 위한 방안
 - 지역사회내 자영업자를 위한 '상호부조형 공동체' 지원 확대
 - 자영업자로서의 자긍심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

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

현대경제연구원 | 이슈리포트 | 2013. 8.28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향상 대책 마련, 물가·주거안정을 통한 가계수지 개선 지원 세제개편 및 복지정책 수립 시 체감중산층의 계층의식 고려

-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현황
 - OECD 기준 중산층은 월가처분소득(4인 가족 기준) 354 만원에 자산규모 2.5 억원인 반면,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월가처분소득 500 만원에 자산규모 7.8 억원
 - OECD 기준 중산층임에도 본인이 저소득층이라 생각하는 비율은 54.9%
 - 남성 가구주이면서 고령층인 비정규직·자영업자 중에서 괴리가 심각
- 괴리의 원인분석 결과
 -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가 심각한 수준이며, 인구특성으로 보면 고령층인 남성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중에서 다수를 차지
 - 중산층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이나 자산규모뿐만 아니라 가계수지, 체감물가, 일자리의 질, 주택보유, 노후준비 등
- 시사점
 -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향상 대책 마련
 -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을 높이고 고용안정성 강화
 -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향상을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과 출혈경쟁이 심한 업종으로의 신규진입 자제
 - 물가와 주거안정을 통해 가계수지 개선 지원
 - 노후준비 및 자산형성 지원
 -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, 퇴직·주택·개인연금 강화, 부동산 가격안정
 -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'내집마련 꿈'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 조성
 - 중산층의 상당수가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인식하는 만큼 세제개편 및 복지정책 수립 시 이를 고려하여 정부정책 수립

주요국의 주택가격 비교와 시사점

KB 경영연구소 | KB 경영정보리포트 | 2013.9.6

http://www.kbfg.com/kbresearch/index.do?alias=report&viewFunc=default_details&categoryId=1&subCtgId=&menuId=&boardId=&rBoardId=101&articleId=1002505&sTxt=&sType=&pageNo=1

소득대비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은 추가 가격하락의 압력으로 작용 가능

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주택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

- 주요국의 주택가격 수준 비교
 -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경우 한국 및 서울은 높은 수준
 - 주요국의 주택구입능력은 PIR* (소득대비 주택가격 수준) 3.0 수준이 적정
 - 주요 대도시의 PIR 은 평균을 상회, 홍콩(13.5)이 가장 높고 서울(9.4)은 주요 대도시들에 비해 높은 수준
 - 한국의 주택구입 여력은 비교적 양호하나 서울은 다소 어려운 수준
- 국내 주택시장의 중장기 변화 전망
 - 소득대비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, 추가 가격하락의 압력으로 작용 가능
 - 향후 금리인상 등의 외부충격 발생시 과도한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조정 압력으로 작용 가능
 - 부동산 가격 하락시 주택담보대출 LTV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추가하락 가능성 존재
 -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, 주택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
 - 최근 부모세대의 주택상속 의향 축소에 따라 주택구입의 부담은 커질 전망
 - 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향후 소형 및 임대주택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
 - 주택가격 하락세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
 - 주택구매계층은 꾸준히 감소하나 주택가격의 급락을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
 - 한국의 부동산 버블붕괴 가능성은 낮으나 장기적으로 하락국면이 지속될 가능성 존재

*PIR(Price to Income): 주택시장의 중간값을 가구의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의 구입가능여부에 대한 지표로 주로 사용되며, World Bank 와 UN 에서도 권장

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: 주택과 소비 간 기간내대체탄력성과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

한국개발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2.12.31

http://www.kdi.re.kr/report/report_class_etc.jsp?pub_no=12876

확장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 하락과 경기위축 시기에 금융과 경기안정성 도모에 일조 자산가치의 하락을 통한 소비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

- 배경
 - 주택시장은 2007년 이후 실물경기와 금융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인식
 -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1년 기준 389조원으로 전체 GDP의 31.5%
- 결론 및 시사점
 - 결론
 - 통화정책 프론티어라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택과 소비가 상호보완재로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
 - 주택과 소비 간 보완성이 강할수록 경기안정성을 추구하는 통화정책은 더욱 주택가격에 의한 경기변동에 주의가 필요
 - 시사점
 - 통화정책 운영 시 중앙은행의 주택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 -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 하락 시기와 경기위축 시기에 금융안정성과 경기안정성 도모에 일조
 - 자산가치의 하락을 통한 소비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
 - 주택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유도할 필요는 없으나 지나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본질가치 분석은 중앙은행의 과제

SOC 과소투자 우려된다 : soc 스톡과 투자계획 평가

현대경제연구원 | 한국경제주평 | 2013.9.16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공공부문은 SOC 스톡의 지역균형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의 SOC 투자를 이끌 유인책 마련 새로운 SOC 사업의 적극 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

- SOC 투자의 감소 추이
 - SOC 투자는 2010 년 41.7 조원에서 2012 년 35.3 조원으로 감소세
 -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009 년 4.2%에서 2012 년 최저수준인 3.2%를 기록
 - 2016 년까지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.4%로 급감할 전망
- 시사점
 - SOC 정부지출 축소에 따라 성장잠재력의 하락 우려
 - SOC 스톡 편중현상을 균형화하고 기존 인프라를 유지·관리하기 위한 SOC 투자 증진
 - SOC 스톡 부족부문을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편성
 - 지자체 SOC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
 -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의 효율화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증대
 - BTL, BTO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자유치를 활성화
 - 민간투자대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정부지급금 보조비율을 높여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
 - SOC 건설에 외국자본의 펀딩이나 외국건설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관련 제도개선
 - 건설사들의 미래유망기술 확보 및 신사업 확장을 유도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
 - Smart City, Green Home, 건설-IT 융합산업 등의 신사업 확장 및 R&D 투자 유도
 - 전기자동차 충전·교통 인프라, Smart Grid 인프라, 에너지저장시스템 도입 등의 SOC 신사업 확장 유도

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와 정책적 함의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| 보건복지 Issue&Focus | 제 205 호(2013.8.30)

https://www.kihasa.re.kr/html/jsp/share/download_forum.jsp?bid=21&aid=275&ano=355

다문화가족의 증가와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법적근거 확보

해체가족의 기본생활 안정화를 위해 소득보장정책 강화

차별해소를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 마련

- 현황
 - 국제결혼은 2000 년 11,605 건에서 2012 년 28,325 건으로 2.4 배 증가
 - 다문화가족 규모는 2007 년 126,955 명에서 2012 년 267,727 명으로 6 년간 110.9% 증가
- 특성 변화
 - 다문화부부의 연령 차이는 2000 년 6.9 세에서 2010 년 12.1 세로 10 년간 5.2 세 증가
 -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3 년 내외이며 이혼건수는 2000~2012 년 동안 7.7 배 증가
 - 다문화가족의 구성형태는 부부중심에서 부부와 자녀중심의 2 세대 핵가족형태로 전환
- 정책적 함의
 -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법적근거 확보 및 가족유형별 차별적인 정책 마련
 - 해체가족의 기본생활 안정화를 위해 소득보장정책 강화
 - 다문화자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양육지원 강화와 방과 후 보호체계 강화
 - 기본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권 보장
 - 사회통합차원에서 차별해소를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 마련

도시부 도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정책방안 개발

한국교통연구원 | KOTI-Brief Vol.5 12 호 | 2013.8.2

http://www.koti.re.kr/board/project/index.asp?mcode=030303&code=research&cate=F&made=view&board_record=1391

지자체가 관리하던 도시부 도로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 교통혼잡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한 교통혼잡 관련 DB 구축

- 대도시의 도로 교통혼잡 현황
 - 서울시의 평균 통행속도(21~22km/h)가 가장 낮으며 울산시가 가장 높음
 - 인구규모에 따른 도시별 교통혼잡 상황을 보면 서울시의 평균 통행속도는 30.9km/h
- 도시부 도로혼잡 원인 분석
 - 도시화율이 1970년 50.1%에서 2010년 90.9%로 증가
 - 자동차 대당 도로연장은 1970년 314.4m/대에서 2010년 5.9m/대로 1.9% 수준
 - 2010년 도로에 투자된 재원 17.7조원 중 도시부 도로에는 27.9%인 4.9조원 투자
- 도시부 교통체증 악화 원인
 - 1970년 대비 자동차 보유 대수는 약 142배 증가
 - 전국의 교통혼잡비용 중 7대 도시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전체의 58.7%('02년) ~ 63.2%('09년)인 반면, 도시부에 투자된 재원은 22%('03년) ~ 27.9%('10년)에 불과
 - 정부지원 도로사업 추진 미흡과 지자체의 예산부족
- 정책제언
 - 지자체가 관리하던 도시부 도로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
 - 도로시설의 문제점 개선과 각종 교통운영 기법들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 개발
 - 세부지침과 함께 실제적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
 - 교통혼잡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한 교통혼잡 관련 DB 구축

스마트 뉴딜(New Deal) :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

삼성경제연구원 | CEO 인포메이션 | 2013.8.28

<http://www.seri.org/db/dbReptV.html?menu=db02&submenu=&pgno=1&pubkey=db20130828001>

기업은 조직 내에 공공데이터 활용체계 구축

정부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

- 배경
 -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오픈데이터(Open data) 정책 대두
 - 공공데이터 개방은 다양한 영역에서 파급효과를 유발
- 공공데이터 활성화의 선결과제
 - 공공데이터 활성화의 문제점은 낮은 인지도, 프라이버시 문제, 민간참여 유도 미흡 등
 - 정부와 기업은 성공사례 체감 확산, 개인정보 이용모델 재정립, 민간참여 인센티브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
- 시사점
 - 공공데이터 활용시장은 한국기업뿐 아니라 글로벌기업의 각축장
 - 공공데이터 개방은 전 세계 기업에 동시에 주어지는 기회
 - 한국기업들은 공공데이터를 글로벌 경영역량을 증진시키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
 - 기업은 조직 내에 공공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
 - 기업의 활용방식에 따라 공공데이터가 주는 효용이 크게 달라짐
 - 빅데이터 분석조직의 틀 안에서 공공데이터와 내부데이터의 복합적인 활용체계 구축
 - 정부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
 - 정부는 기존 자원의 개방을 넘어 새로운 공공데이터 자원을 확보
 - 공공데이터를 통한 뉴딜은 사회비용을 줄이고 똑똑한 국가를 만드는 지름길

※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.

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
email: urbandata@si.re.kr
phone: 02-2149-1022